광주·전남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478명 분석해보니

20대 한명도 없고 30대 출마도 확 줄어

2006년 선거 비해 젊은 후보 기근 현상 심각

'정치신인 등용문' 무색…지방의회 보수화 우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 가운데 20·30대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극히 적어 지방의회가 참신한 젊은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에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 186명(광주 55명·전남 131명) 가운데 30대는 광주와 전남 각각 2명씩에 불과하고, 2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186명의 광역의원 후보 중 30대가 15명에 달했다.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중에는 4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7명 ▲60대 7명 순이었다.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전남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탓인지 50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48명, 60대도 22명이 됐다.

광주·전남 기초의원도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날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0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기초의원 지망생 105명 가운데 30대는 11명에 그쳤고, 전남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187명 중 30대는 10%에도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20대 3명, 30대 67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전남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번 6·2지방선거 전국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1천176명 가운데 20대는 한 사람도 없고 30대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58명에 불과하다. 전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2천686명 가운데 20대는 단 10명, 30대는 1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에 도전했던 20, 30대 후보가 371명(20대 15명, 30대 356명), 기초의원 후보가 1천448명(20대 55명, 30대 1천393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20, 30대들이 경제적으로 좀처럼 기반을 잡지 못하면서 평소 지방의회 진출에 뜻을 품고 있던 젊은이들까지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설사 뜻이 있다 해도 정당 공천제 탓에 경제력, 정치적 배경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젊은이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20, 30대의 지방의회 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회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자 했던 애초의 시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있지 못하면서 지방의회가 보수화만 촉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여성 예비후보 또한 이날 현재 27명에 불과해 지난 2006년 41명에 비해 34% 가량 줄었다.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직업은 ▲지방의원 68명 ▲정치인 67명 ▲농수축산업 33명 ▲회사원 29명 ▲상업, 건설업 각각 21명 ▲교육자 9명 ▲약사·의사 4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연령대 (단위:명)

	2006 지방선거	2010 지방선거
20대	3	0
30대	72	27
40대	3	192
50대	351	181
60대	134	75
70대	5	2

※2010년 숫자는 10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

눈보라 속 한표 호소 폭설이 쏟아진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가로변에서 단체장 예비후보가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MB 지방선거 앞두고 잦은 지방 나들이

대구·경북 이어 충청권 방문

민주 "사실상 선거운동"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대전·충남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수정이 정치논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국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K벨트'의 중심이 오송·세종시·대전 등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충청지역이 21세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중심축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며 '충청 역할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건설의 지역균형발전 역행론을 염두에 둔 듯 "그 지역이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잘하는 데 더 지원해야 한다"면서 "골고루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대구·경북 방문에 이어 이날 대전·충남지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통해 각종 공약을 제시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말로는 업무보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일정은 시도별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야당이 매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 국정 운영을 할 수 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광주·전남 방문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BS 강의서 수능문제 얼마나 나올까

10일 치러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광주 대성여고 3학년생들이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항·내용 직접 연계율 올해 보다 2배 이상 높여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EBS 강의가 수능시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광주지역 고교 진학 교사와 전교조측은 공교육과 EBS의 연계를 전제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연종 광주고교 진학교사협의회장은 "EBS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사교육이 축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교실수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공교육의 충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도 "사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낙후지역 등을 감안하면 EBS의 출제율을 높이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EBS의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학교교사 중심으로 가고, 학교교육과 EBS 강의가 연계돼야만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동안 EBS의 수능강의와 실제 수능시험 문항이 얼마나 연계됐을까.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능강의 내용과 문항이 엇비슷하거나 일부만 변형하는 등의 직접 연계율은 언어 30%, 수리 가 40%, 수리 나 56.7%, 외국어(영어) 30%다.

같은 예시문을 쓰거나 EBS 강의 내용을 유추해 풀 수 있는 간접 연계율은 언어 54%, 수리 가 36.7%, 수리 나 20%, 외국어 50%로, 직·간접 연계율을 합하면 76.7~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직접 연계율은 지문이 교과서나 유명 작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언어가 30~40%, 문제 유형이 대체로 엇비슷한 수리는 40~60%, 또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외국어는 20~30% 수준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 입시학원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 정도는 어느 문제집이나 비슷할 것"이라며 적중률을 대략 20% 안팎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안 장관이 30% 반영되던 것을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은 EBS가 그동안 '비슷하다고 억지로 우겼던' 간접 연계율을 빼고 문항 자체가 유사하거나 숫자를 바꾸는 등 일부 변형한 직접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교과부와 EBS, 평가원이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안 장관이 '70% 이상 반영'을 공언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과부가 최근 각 입시학원 스타급 강사와 일선 학교 인기 교사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새로 꾸려 출범시키자 EBS 수능강의의 히트수는 배 이상으로 뛴 반면 온라인 입시학원 회원수는 상당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